韓·美, 6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농산물-섬유' 본격 힘겨루기

의약품·지적재산권 분야도 신경전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오는 6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된다.

이번 협상은 양국이 내놓은 '개방계획표'에 대한 수용여부를 본격 논의하는 자리여서, 상대방의 관세장벽을 허물기 위한 밀고당기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국의 협상전략,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한다.

◇**농산물**=미국이 지난달 15일 통고한 개방안에 따르면 자국농산물의 관세철폐 기간을 '즉시-2년-5년-7년-10년' 등 5단계로 나누고, 관세철폐가 유예되는 민감품목 등은 아예 넣지도 않았다.

반면 우리 정부는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와 기타 등 5단계 틀에 맞춰 1천531개 품목을 분류했으며 특히 관세철폐의 예외적용을 받는 쌀 등 30여 민감품목을 기타 품목을 포함시켰다.

결국 우리의 취약점인 쌀 등 농산물을 고리로 자국 섬유산업을 보호하는 주고받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의약품·자동차**=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결정 과정에 자국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은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도 공평하게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일단 제동을 걸겠다는 복안이다.

자동차는 세제가 관건이다. 미국은 현재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폐지요구에 대한 내부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게 우리측의 관측이다.

국내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9가지인데 이중 배기량이 적용되는 것은 자동차세, 특별소비세, 지하철 공채 등 3종이다.

우리측은 '미국 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저조한 것은 기술력과 경쟁력의 문제일 뿐 세제와 연관된 가격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부각, 세제폐지는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지적재산권**=미국측은 출판물 저작권을 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인터넷물의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은 지적재산권 문제는 한·미 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교역을 벌이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 지적재산권 연장의 득실을 계량화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한기총 등 보수단체 비상구국기도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재향군인회 등 200여개 보수단체 회원 5만명이 2일 오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열고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유보 및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전남도 교육위원회 의장에 듣는다

"중앙정부·지자체와 협력 교육재원 확보"

이 승 연 광주시 의장

"기본적으로 집행부인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감시·견제를 철저히 하겠지만, 대안 제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일 제5대 광주시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승연(63) 위원은 "어려운 광주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위원들에게 폭넓은 안목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동료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광주교육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난 7월31일 교육위원 선거에 앞서 ▲광주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글로벌시대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전력 ▲교원복지 향상을 위한 교원사기진작대책추진단 구성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의장은 특히"광주시교육청의 부채는 현재 1천300억 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 빠져나간다"며 "지역 국회의원·광주시장·구청장·시민대표·교육청·교육위원·언론인이 참여하는 '광주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협력해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또 "평준화도 중요하지만 국가 장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을 위해 수월성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0.37%(1천 명)에 불과한 영재교육 학생 수를 집행부와 협의해 최소 1%(3천 명)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최근 불거진 광주 S중 기자재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일부 학교의 문제인데도 마치 광주교육계 전체가 '비리의 온상'처럼 내비쳐져 안타깝다"며 "비리근절을 위한 교육청의 제도개선 노력과 교육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의식개혁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교육행정 견제·감시…위상 정립 최선"

유 제 원 전남도 의장

"교육위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고 교육행정을 견제·감시하는 교육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실시된 제 11대 전남도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유제원(61)위원은 교육위원의 위상 정립과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제1선거구에서 출마해 당선된 유 의장은 재선 교육위원으로, 지난 제4대 교육위원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유 의장은 "교육재정의 확충,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노후화된 급식실 개선·통폐합등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위원간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선거 후 곧바로 전화통화를 통해 의장선거에 대한 위원들간의 앙금을 털어냈다"며 "위원 서로가 화합하고 전남 교육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특히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2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든 도민 및 교육가족으로부터 사랑받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의장은 이를 위해 "동료 위원들의 고견과 충고를 겸허히 수렴할 것이며 발로 뛰는 위원회 활동을 통해 모두가 한데 뭉치면 전남교육발전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전남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유 의장은 광주동신중·고 에서 1년간 교사생활을 하다 현재는 (주)유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현장과 시각

바다이야기와 오락산업

박 치 경
정치부 차장

이런 경우를 '공교(工巧)롭다'고 하는 것일까? 최근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 아시아의 라스베가스로 불리는 마카오를 취재하고 왔다. 예정된 일정이었지만 사행심 논란이 시끄러운 때에 카지노 도시 마카오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마카오의 라스베가스식 카지노인 '찐샤(金沙) 오락장' 분위기는 전문 도박사들의 '포커페이스'와는 영 딴 판이었다. 접근이 수월치 않은 밀실에서는 숨소리를 죽여가며 고액을 배팅하고 있었을지 모를 일이지만, 중국 대륙에서 휴가차 날아온 할아버지와 손녀 딸이 손을 잡고 들락거리는 객장은 말 그대로 '오락장' 모습이었다.

카지노 왕국 마카오는 대변신 중이었다. 미국 베네티안·갤럭시 등 유수의 카지노 운영사들이 거액을 투자한 복합레저타운 건설이 한창이다. 카지노를 주축으로 호텔과 전시컨벤션, 휘트니스와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복합레저타운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카지노 왕국에서 복합레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마카오는 문화관광산업을 통해 낙후에서 탈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지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남도가 지역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J프로젝트 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 결과 사업완공연도인 2020년 카지노가 전체 관광수익의 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외국인이 동시 출입하는 카지노를 허용해야 전체 투자수익률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시 보다 크게 앞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카지노의 폐해를 강조하지만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현실을 외면하기도 어렵다. 대규모 개발사업 성공의 요체가 높은 투자수익률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합법적인 오락산업과 사행성 도박의 구분이다. 가족들과 스스럼없이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응당 오락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밀실에서 쾌락을 탐닉하고, 금력과 권력이 야합한다면 분명 도박이다.

이번 '바다이야기 사태'를 오락산업 공론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합법적인 오락산업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만 보일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활용방안과 문제점 해소대책을 적극 찾아보자는 것이다.

당장 껄끄럽다는 이유로 문제를 애써 못본 체 하기보다는 소용돌이의 중심에 파고들면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unipark@kwangju.co.kr